

새정치 통합선대위 체제싸고 '백가쟁명'

비주류 "공천 전권줘야"…주류 "文·安·朴 공동위원장"

安 "혁신안 답 없인 연대 불가"…김부겸 "선수 다 모아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지도체제 개편이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의 문재인 대표 체제로는 내년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점에서 통합선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지도체제 개편의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표 등 주류 진영에서도 일단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내 분열을 막고 차기 총선 책임에서도 일정 부분 벗어날 수 있어 사실상의 출구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대위 구성을 놓고 주류와 비주류의 생각은 제각각이다. 주요 쟁점은 통합선대위의 권한과 참여 인사 등이다.

비주류 진영에서는 문 대표 등 현 지도부의 백의종군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통합선대위가 총선 공천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주류 일각에서는 혁신위가 제시한 공천혁신안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에 반해 주류 진영에서는 문 대표가 통합선대위의 수장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문 대표만으로는 안 되지만 문 대표 없이 승리할 수도 없다는 논리다.

선대위 참여 인사를 놓고도 이견이 충돌하고 있다. 비주류 진영에서는 각 계파 수장들이 참여하는 폭 넓은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천정배, 박주선 의원 등

신당 밖의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밖의 김부겸 전 의원도 10일 평화방송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통합선대위 출범 등과 관련, "일단 야권의 선수라고 할까, 될 수 있는 모든 플레이어를 다 불러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주류 진영에서는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계파별 인사들이 모두 선대위에 참여한다면 차기 총선 공천을 둘러싼 지분 나눠먹기라는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철수 전 대표는 10일 주류 진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른바 '문·안·박 희희망스크럼'에 대해 "제가 요구한 10가지 혁신안에 대해 (문 대표가) 답을 하지 않고서 연대 얘기는 불가능하다"고 거리를 뒀다.

당내에서는 문 대표가 선거구 답판을 마무리 짓고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지도체제

개편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문 대표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재신임) 이후 같은 상황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저도 답답하다. 서로 더 열어놓고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오는 12일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회동해 당 상황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그동안 문재인 대표의 퇴진과 조기선대위 구성을 주장했었다.

한편, 오는 12일 개최될 예정인 오픈 프라이머리(원전국민경선제) 의원총회는 당내 내분의 흐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당 주류가 주도하는 '현역 의원 20% 몰갈이' 등의 공천 방식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생 팽개친 국회, 총선서 심판을”

박대통령 ‘국민 심판론’ 총선 앞 논란 예고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현 정부의 숙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않는 국회를 성토하면서 ‘국민 심판론’을 들고 나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로만 선

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또 “국회가 이것(민생법안)을 방치해서 자동폐기된다면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내년 총선

을 앞두고 국민을 상대로 직접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전직 청와대 참모들과 현직 장관들의 대구·경북(TK) 지역 출마설 그리고 TK 물갈이 논란으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는데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여야간 역사쟁쟁 대치전선이 명확히 그려진 미묘한 시점에 박 대통령의 대국민 호소가 나와 주목된다.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청와대와 새누리당 간 갈등, 이를 통해 촉발된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태 당시에도 박 대통령은 ‘배신정치 심판론’으로 여론의 내분을 소강상태로 만들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기호 일률적 부여는 특권…폐지해야”

천정배 “묻지마 투표 강제”

무소속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은 10일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특정정당 소속 후보에 일률적으로 같은 ‘기호’를 부여하는 ‘기호순번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의석수에 따라 부여되는 기호순번제는 유권자에게 묻지마 투표를 강제하고 기성 지배정당에 특권적 지위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미 대부분의 정치신진국은 물론 이웃인 일본도 기호순번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며 “기호제를 아예 없애거나 로테이션제로 하는 등 모든 후보



자가 동등하게 유권자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또 현재만 19세인 선거연령의 만 18세 하향 조정을 주장했다.

선거제도 및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 천 의원은 “(결정이) 지연되면, 예비후보로서 활동할 기회를 갖지 못한 정치신인들에게 불리하다”며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지금이라도 선관위가 제안한 안을 중심으로 민의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

“통합신당은 중도세력 결집하는 빅텐트”

박주선 “다음달 창준위 발족”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박주선 의원은 10일 “12월이면 단일신당 창당에 대한 희소식을 국민에게 전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창당 일정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역시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장세환 전 의원이 통합신당의 최고 역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창립한 ‘전북희망연대’ 출범식에 참석, ‘신당은 시대의 소명이다’라는 축사를 통해 “내년 4월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치일정상 내년 1월까지 신당 창당이 완료돼야 한다. 그리고 창당을 선언할 발기인대회 및 창당 준비를 위한 창당준비위원회(법적 기구)를 늦어도 12월까지

는 발족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통합신당의 모습에 대



해 “친노세력을 제외한 민생·개혁·정권교체에 동의하는 합리적 보수세력과 건전한 진보세력이 하나로 융합하는 정당”이라며 “친노세력을 제외한 중도개혁세력이 총결집하는 빅텐트 정당”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특정 패권세력과 운동권 강경세력이 지배하는 새정치는 더 이상 호남 소외 극복은 물론 호남의 정치 비전을 실현할 수 없다”며 “야권의 창조적 재편을 추진해 중앙 정치무대에서 실종된 호남의 정치력을 복원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러했듯이 지역감등 시대를 종식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강호인 국토부장관 후보

김영석 해수부장관 후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토교통위는 보고서에서 강 후보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국토부장관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보유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직경력이 경제·재정 분야에 집중돼 주택 문제와 건설업, 철도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농해수위도 보고서에서 “김 후보자는 해양수산부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했고 최근까지 해수부 차관으로 재직할 바 있어 해양수산 정책, 행정 및 예산 등에 대해 상당한 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도덕성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모두 마치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조만간 강 후보자와 김 후보자를 국토교통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에 공식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전북희망연대출범식에 간 유선호·장세환 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유선호(왼쪽) 전 의원과 장세환 전 의원이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남 및 전북 희망연대출범식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호남혁신연대 핵심은 새정치 독점 타파”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0일 “호남 혁신연대의 핵심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호남 독점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광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호남은 그동안 경쟁없는 일당 독

점 체제로 인해 호남 민생을 더욱 어렵게 했다”면서 “호남 혁신연대가 그 기득권 회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호남에서 기득권을 쥔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 대신, 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연대세력이 혁신을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최근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는 “선거용 정당을 만들려고 이합집산하면 국민이 표를 주지 않는다”면서 “신당 창당을 내건 정치

세력이 혁신의 길로 갈 것인지 여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체가 구체화되면 연대 등은 판단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시민이 관심 갖는 천정배 의원 중심의 신당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기득권 타파, 주도세력 교체, 민생우선이라는 원칙에 맞는 정당과 시민사회·개인과 적극적으로 연대와 협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담보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감평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빛고을새마을금고

<p>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p>	<p>용주점 062)525-2774 (용봉동 주민센터 앞)</p>	<p>삼각점 062)525-2776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p>
---	--	--